

전 | 기 | 계 | 소 | 식

국 내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방향 “합리적인 전력망 산업 개혁방안” 연구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는 6월 17일 개최된 “제70차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 조정특별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존중하여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 추진은 중단하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여 내부 경쟁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여정부에서 배전분할은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금번 공동연구단의 연구는 배전분할 여부에만 국한된 것이다.

배전분할 관련 금번 결정이 도출된 배경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나,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부족 사태를 계기로 각 국가에서는 이를 신중히 추진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망산업에 대한 구조개편 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2003년 9월 노사정 합의로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약 8개월간의 연구를 한 결과, 전력산업의 특수성(저장 불가능,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 수입 불가)으로 인하여 배전분할을 통한 도매시장 도입시 가격급등, 공급불안정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조직체계안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사업부제를 도입하여,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부별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경쟁체제를 도입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추가 연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전부문 외의 다른 부문에 대한 구조개편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계획 발전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등을 통해 분할된 발전회사들의 유효경쟁을 강화하고, 남동발전 민영화도 당초 방침대로 추진해 나가되, 증시여건을 감안하여 경영효율 개선을 통한 매

각가치 제고에 주력, 공동연구단 연구결과에서도 전력산업의 특성이 다른 산업과 상이하므로 금번 연구결과가 다른 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적시한 바 있다.

산자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공동 대응

산자부 차관, 「신·재생에너지 세계회의 2004」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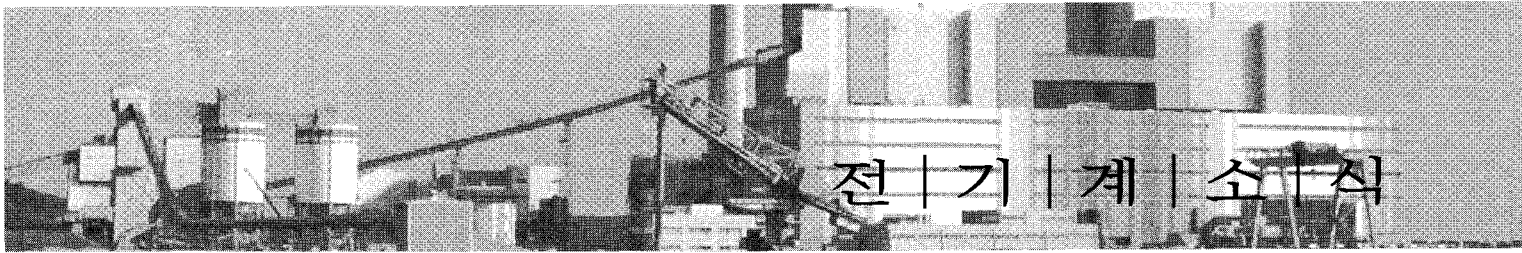
김주철 산업자원부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공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6. 1~4일(4일간) 독일 Bonn에서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세계회의 2004」에 참석하여 독일 슈뢰더 총리, 중국 장구바오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부의장 등 각 국의 수석대표들과 만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구체적 액션 플랜을 협의,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회의는 '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역할 증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미래를 반영하는 전세계적 차원의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금번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에서 각 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대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전세계적 확대 보급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 방안들을 채택해 나가기로 하는 등 금번 회의는 신·재생에너지의 전세계적 확산의 이정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도 친환경 국산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를 2011년까지 총 에너지의 5%까지 공급하기 위해 금년을 「신·재생에너지 元年」으로 삼아 예산을 두배('03년 955억원 → '04년 1,964억원)로 확대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동 목표 달성시 연간전력은 100만Kw급 원전2기 발전량, 열은 석유 6천4백만 배럴(우리나라 1개월 석유소비량) 대



전 | 기 | 계 | 소 | 식

체 전망

이를 위해 기술중요성 및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공공기관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04.3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등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발전차액지원액의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나아가, 전기사업자의 총 발전량(또는 구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또는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발전의 무할당제(RPS)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조직도 정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149여개국 및 EU의 각료(급) 대표, 각국의 NGO 및 기지단 등 총 3,000여명이 참석하여 지속가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은 산자부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대안센터,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상임이사 등 총 20명의 산·학·연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한전, 필리핀 해외사업 활기 띠어 한준호 사장, 比 아로요 대통령 면담 세부발전소프로젝트 MOU 전달

한국전력이 필리핀 말라야와 일리한 지역에 이어, 세부(Cebu) 지역에서도 발전소 건설·운영사업을 추진키로 하여 해외사업에 활기를 띠고 있다.

한준호 한전 사장은 6월 21일 20시30분(현지시각)세부시 Water Front Hotel에서 필리핀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대통령에게 지난 6월 9일 韓-比 양국간 에너지담당 장관(이희범(李熙範) 산자부 장관, 빈센트 페레즈 에너지부 장관)이 서명한 세부(Cebu) 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MOU를 공식 전달 하였다.

韓사장의 이번 아로요 대통령 면담은 필리핀측의 요청으로 이

루어졌으며, 이 자리에는 유명환(柳明桓) 주필리핀 대사, 빈센트 페레즈(Vincent S. Perez)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이 함께 하였다.

금번 세부(Cebu) 발전소 프로젝트는 한전이 기존 민간발전사업자 Salcon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필리핀 제2의 도시인 세부지역에 20만kW(추후 결정)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억5천만 달러 정도이며, 건설기간은 약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한전은 이번 양국 정부간 MOU의 공식 전달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타당성 검증작업을 마치고, 필리핀 정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 동안 한전은 필리핀에서 65만kW 말라야화력발전소 성능복구 및 120만kW 일리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현재 운영중임. 또한 이들 지역에서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현지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도 형성하여 좋은 이미지를 심어 왔다.

한편, 한전은 최근 전력분야의 높은 브랜드파워를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필리핀에서의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중국 하남성 무척 유동층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인도네시아 보조네가라 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운영사업 등 중국 및 기타 아시아지역의 전력산업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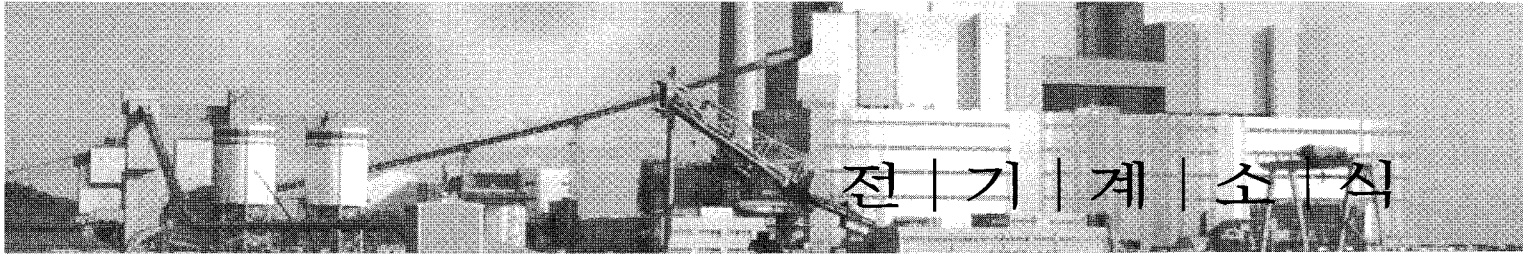
열린경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韓電, 외부인사가 참여한 '열린경영혁신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한국전력이 외부 전문인사가 참여하는 "열린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열린 경영에 나섰다.

한전은 6월 15일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 11층 회의실에서 언론인, 학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외부인사 24명이 참여하는 "열린경영혁신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한준호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열린 경영혁신으로 「윤리경영·투명경영·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여, 국민과



전 | 기 | 계 | 소 | 식

고객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겠다" 고 말하였다.

이날 발족한 "열린경영혁신위원회(총 24명)"는 1개의 자문그룹(6명)과 고객만족, 환경친화, 윤리경영, 중소기업육성 및 미래발전 등 5개의 전문그룹(1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문그룹은 사외 저명인사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게 되며, 전문그룹은 각 분야별 정책사안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실무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한전은 분기 1회 "열린경영혁신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열린경영혁신위원들은 한전 비상임이사에 준하는 각종 경영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일선 현장의 열린경영 실천을 위해 한전 사업소별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임. 전국의 한전 지사·지점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고객만족자문위원회"를 활용할 것이며, 송변전 분야의 전력관리처나 건설처에도 "녹색환경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건설민원과 송전선로 선하지(線下地) 보상 등과 같은 각종 환경문제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번 "열린경영혁신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종래의 내부 시각에 의한 수동적·방어적 경영에서 벗어나, 회사 문호를 개방하여 열린 경영체제로 전환할 것임.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아 경영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하여는 열린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유인할 것이다.

열린경영혁신위원회 위원들은 회사 경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회사경영의 잘 잘못을 지적하고, 회사는 경영감시를 의식하여 업무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전력사업에 대하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화와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사업 추진의 실행력도 높이고자 한다.

한전은 이러한 열린 경영을 통해 한전 내부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회사로 거듭나고자 하며, 이와 함께 밖으로는 한전의

저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휴가나 설비보수 또는 조업시간 조정으로 낮시간 전기 아끼면 지원금 드립니다

- 韓電, 7.19~27, 8.9~20 전력수요 감소 위한 전력부하관리 지원제도 시행
- 한전 지사·지점 또는 홈페이지(www.kepco.co.kr)로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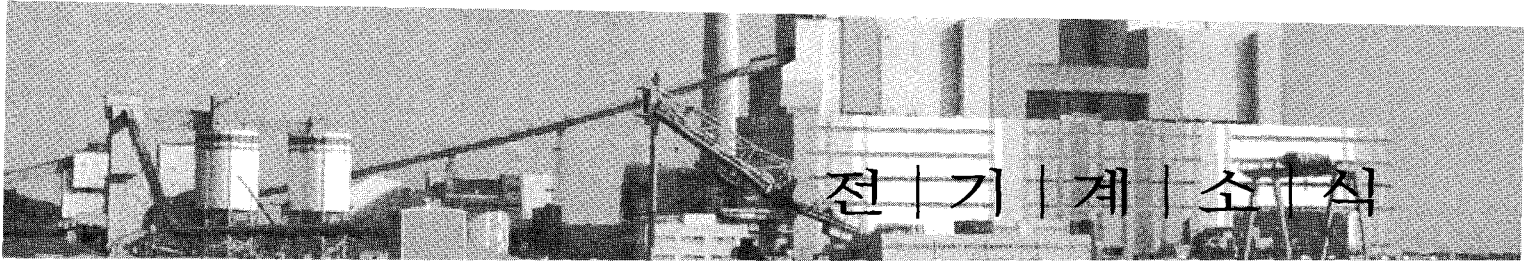
낮시간 전기사용 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올 여름 휴가나 설비보수 또는 조업시간만 잘 조정해도 상당한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은 올해 하계 부하조정 기간을「7월19일~27일, 8월9일~20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고객이 한전과 약정한 기간에 전력사용 규모를 줄일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력부하관리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하관리 지원제도에는, 부하조정 기간 중에 기업체가 집단휴가나 설비보수를 실시하여 낮 시간대의 최대수요 전력을 전년 7, 8월의 50% 미만으로 줄이는「휴가·보수기간조정 지원제도」와 조업시간을 조정하여 피크(peak) 시간대(오후 2시~4시)의 평균전력을 오전보다 20% 이상 줄이는「자율절전 지원제도」가 있다.

특히「휴가·보수기간조정 지원제도」의 경우, 한전과의 약정을 일부 이행한(약정이행일수 50%이상) 고객에게도 지원금을 50%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고객의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 최소약정 일수를 '3일 이상'에서 '2일 이상'으로 축소하였다.

이러한 부하관리 제도는 에어컨 등 冷房負荷로 인해 여름철 낮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은 물론 전력설비 투자비 절감과 부하율 향상 등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전기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다주게 된다.



전기계소식

지난해의 경우「휴가·보수기간조정 지원제도」에 총 1,810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자율절전 지원제도」는 703개 업체가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참여신청은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한전 인터넷 홈페이지(www.kepco.co.kr 접속→“전력부하관리” 클릭)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지점에 우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휴가·보수기간조정 지원제도

계약전력 300kW이상의 일반용 및 산업용 고객이 한전과 사전 합의한 기간에 집단휴가 또는 설비 보수 등을 실시하여 연속 2일 이상 주간시간대(08~18시)에 일정량의 전력수요를 줄일 경우(지난해 7, 8월에 사용한 최대수요전력의 50%미만으로 줄이는 경우, 또는 줄이는 최대수요전력이 3,000kW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하조정 시간을 주간시간대(08~18시)로 한정하여 시행하므로, 기타시간대에는 고객이 자유롭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참여하기가 용이하며, 부하조정에 참여한 고객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부하조정량 kW당 하루에 650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부하조정 기간이 5일 이상이거나 최대수요전력을 80%이상 줄이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한 고객은 산정한 지원금에 10%를 추가하여 지급받게 된다.

□ 자율절전 요금제도

이는 계약전력 500kW이상의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고객이 冷房負荷가 집중되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의 평균전력을 당일 10시부터 12시 사이의 평균전력보다 20%이상 줄이는 경우 또는 줄이는 평균전력이 3,000kW이상일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신청한 고객은 7월19일~7월27일 또는 8월9일~8월20일 중에 30분 단위로 최소한 5회 이상 전력사용을 줄여야 하며, 참여고객에 대한 지원금 지급단가는 30분 1회 기준으로 부하조정량 kW당 140원이다.

한전, 전자파 민원 해소 발벗고 나서 학교주변 전자계 노출량 조사연구, 공개 설명회 개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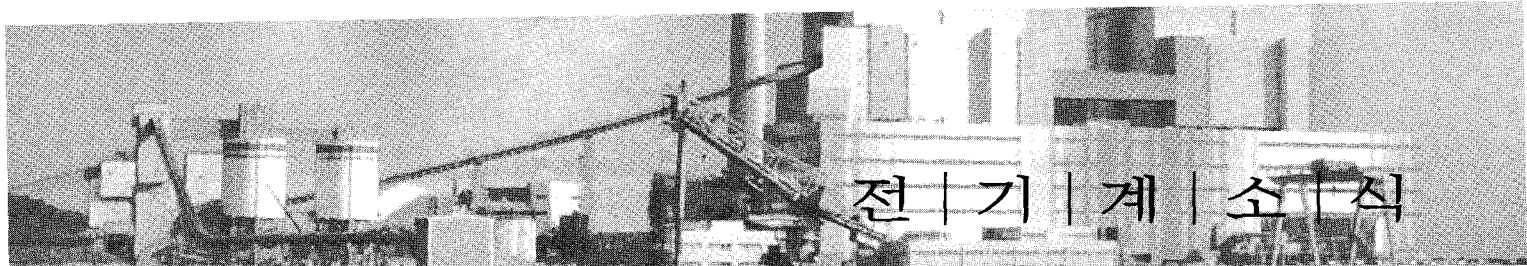
韓國電力은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학교주변 전자계 노출량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그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한전기학회 전자계 생체영향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연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확정된 송전선로 인근의 전국 113개교를 대상으로 작년 7월 3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시행하였으며, 6. 10(목) 대한전기학회 회의실에서 측정대상학교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연구 결과 교육부 제시 113개교중 85개교가 송전선에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4mG(밀리가우스, 전자파측정 단위) 이하 71개교, 4mG~30mG 13개교, 40mG 1개교인 것으로 나타나 송전선로에 의한 전자계 노출량 국제권고기준인 833mG보다 1/40 수준으로 현저히 낮고, 컴퓨터 모니터 등 가정내 가전제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한전은 이미 송전선로 신설시 학교주변을 경과하지 않도록 송전선로 설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전자계의 건강영향이 규명된바 없으나 학교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심지 경과 송전선로 지중화계획 수립시 학교주변의 송전선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지중화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에서는 앞으로도 전자계의 건강영향여부 규명을 위한 연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향후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에서 조사를 요청할 경우 사외 전문가를 위촉,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송전설비 전자계에 대한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해 외

재생가능에너지 「비현실」적 가이아이론창시자 주장

“재생가능에너지는 환상, 지금이야말로 원자력을...”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가이아이론을 제창한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라브록박사는 5월24일자 영국 인디펜던트지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박사는 「지구온난화는 가속화하고 있어 남은 시간은 거의 없다. 비현실적인(재생가능) 에너지의 실험과 사귀고 있을 여유따위는 없다. 문명 그 자체에 위기가 급박해지고 있어 원자력(발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라브록박사는 작년 여름 유럽을 급습하여 2만명이 넘는 사망자를 뱀다고 하는 열파에 대하여 언급하고나서 2100년까지는 지구의 온도가 2~6℃ 상승할 것이라는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의 예측이 실제로 느끼게 되기까지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세계의 인구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속에서 화석연료에 계속하여 의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등의 재생가능에너지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리고 모든 화석연료의 사용을 즉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영향은 1000년간에 걸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택은 원자력발전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뿌리깊은 반대에 대하여 박사는 픽션이나 환경보호단체, 매스미디어에 의해 선동된 이성을 결한 공포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의한 암의 발생이라는 보잘것없는 리스크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참위험인 지구온난화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국 에딘버러에 있는 데빗·흡연구소도 영국정부가 내놓은 재생가능에너지 중시책을 비판. 풍력발전에 지나친 기대를 그만두고

현실적인 선택인 원자력발전옵션을 재고하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중국 원자력발전회사 8기 건설허가신청 우리농축 당분간 국내에서

중국의 원자력발전회사인 核工業集團公司(CNNC)는 정부에 8기(모두 100만kW급. 가압수형경수로=PWR)의 원자력발전플랜트의 건설허가를 신청하였다. 4기는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의 증설, 나머지 4기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건설로, 필요한 우리농연료는 국내에 있는 농축공장에서 조달한다. 신설하는 4기에 대해서 CNNC는 연내에 국제경쟁입찰을 할 예정이며 증설하는 4기는 자기기술로 건설한다. 중국국영·신화사통신이 CNNC의 간부의 말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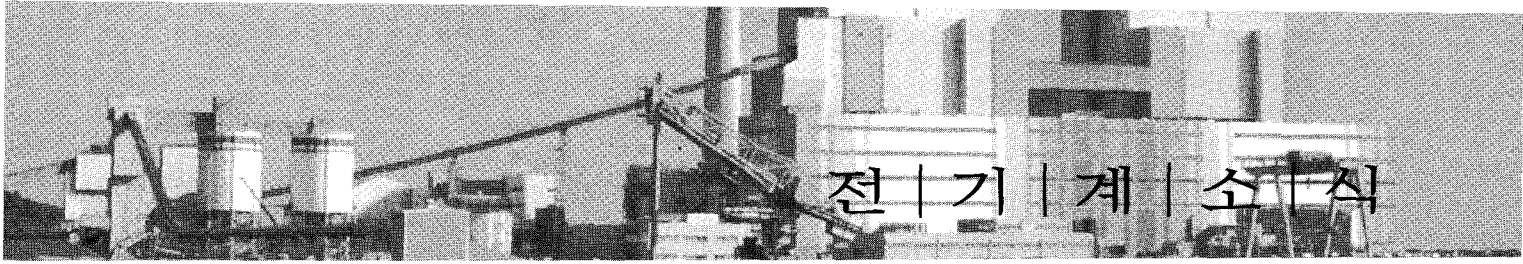
보도에 의하면 연내에 입찰에 붙이는 원자로는 浙江省의 三門(100만kW×2기)과 廣東省의 陽江(100만kW×2기)으로 2006년에 착공한다. 기타 4기는 嶺南원자력발전소(廣東省)와 泰山원자력발전소(浙江省)의 증설로 2005년중에 건설이 시작될 전망이다.

전원·유통설비의 정비가 늦어진 중국에서는 2020년까지 향후 15년간 현재의 설비용량의 4배에 상당하는 3600만 kW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발전에 필요한 천연우라늄탐사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 같으며 「미공표되었지만 잠재량은 크다」라고 한다. 천연우라늄의 탐광에서 농축, 발전, 사용필연료의 재처리, 고속증식로에 의한 핵연료사이클이라는 일련의 흐름을 국내에서 완결시키려는 방향.

그러나 4~5개소 있다고 하는 우리농농축공장설비가 낡은 점이 라든지 「채산성에 걸맞는 광산이 어느 정도 있는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확대와 우리농 탐광의 스피드에 갭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내륙의 甘肅省근교에 처리능력 400~800톤급 상업용 사용필핵연료재처리공장을 건설하여 회수되는 플루토늄을 고



속증식로에서 태우는 핵연료사이클을 완결시키는 계획도 부상하고 있다.

日, 東京電力이 개발한 세계최대 NAS전지

日立的 공장내에 완성

日立製作所오토모티브시스템그룹에서 작년 12월부터 건설이 추진되어온 NAS(나트륨유황)전지시스템이 완성되어 6월부터 운전을 개시하였다. NAS전지는 값싼 야간전력을 저장하여 주간에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전기요금의 저감으로도 이어진다. 완성된 NAS전지는 합계출력 8000kW로 세계 최대로 東京電力이 개발하여 전지와 관련설비 1식을 日立에 리스하는 계약.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동 그룹은 이번의 NAS전지로 연간소비전력의 약 3분의 1을 조달한다.

완성한 NAS전지는 4유닛으로 구성된다. 1유닛의 출력은 2000kW. 이달부터 2유닛이 운전을 개시하고 나머지 2유닛은 7월부터 운전에 들어간다.

NAS전지는 운전시에 이산화탄소라든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시스템. 최대의 장점은 값싼 야간전력을 축전하여 그것을 주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점. 도입한 기업은 전기요금을 저감할 수 있는 외에 전력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의 부하평준화에도 공헌한다. 또 정전시의 백업전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日立은 그룹전체가 추진하고 있는 경비절감의 일환으로 전력코스트의 삭감에 짜넣고 있다. 값싼 야간전력을 사용하는 NAS전지에 대하여 江幡집행역상무는 「전력은 큰 경비로서, 이번의 NAS전지를 기회로 東京電力과 협력하면서 삭감을 도모해 갈 것」이라고 한다.

東京電力도 「리스계약으로 함으로서 도입하는 기업은 설비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적극적으로(NAS전지를) 확대해 가고 싶다」면서 보급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東京電力에 의하면 NAS전지를 도입하는 고객의 약 7할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영국, 전력시장통합, 송전계통이 난제

영국에서는 2005년 4월에 잉글랜드·웨일즈지역과 스코틀랜드지역의 전력시장이 통합되어 전국크기의 도매전력시장이 탄생한다. 여기에서의 거래제도(BETTA)는 잉글랜드·웨일즈지역의 현행제도(NETA)가 모델이 되는데 통합에는 3개의 독립된 송전계통의 통합운영이라는 난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잉글랜드·웨일즈지역의 송전계통은 내셔널그리트트랜스코(NGT)사, 스코틀랜드의 송전계통은 남부를 SPT사, 북부를 SHETL사가 각각 소유·운영하고 있다. 통합운영에는 이것들을 하나의 계통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오퍼레이터(GBSO)의 설립외에 코스트구조가 다른 3계통의 송전요금이라든가 접속요금의 통일이 필수 조건이 된다.

또 동지역에서 배전계통으로 정의되는 132kV계통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송전계통으로 정의되고 있어 접속되는 전원의 취급에 대해서도 양지역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같이 통합운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며 수년간의 운용실적이 있는 미국 각지의 지역송전기관(RTO)에서도 많은 문제가 미해결인채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다.

3계통을 하나의 계통으로 운용하는 GBSO로는 NGT사의 시스템오퍼레이션부가 내정되어 있다. 송전요금제는 NGT사의 현행요금체계를 모델로 스코틀랜드를 포함하여 채용된다. 이 제도하에서 GBSO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요금은 총수입규제액에 따라 3사에 게 배분된다. GBSO의 계통운용요금은 이익과 손실을 이용자와의 사이에서 반분하는 슬라이딩 스케일규제하에서 설정된다.

한편 스코틀랜드지역에서 132kV계통에 접속하는 전원의 취급에 대해서는 잠정 조치로서 송전요금의 할인이라는 형식이 취해지는데 재생가능에너지전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응이 기다려지고 있다. 소매자유화도 NETA도 실시에는 상당한 지연이 있었는데 과연 2005년 4월에 시작이 가능할지 미지수다.